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5/ 15 통권 167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주적이자 동반자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 (Gross-up)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세요
-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조사 착수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투자자에게 생산 자금 선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이라도 투자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개인소득 원천징수세율과 세금적용 과표 계산방법〉

소득종류	과세가격,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적용세율 × 1.1
근로소득	매월, 연 총액에 근로소득 공제, 가족공제 등	기본세율 (6~45%) * P.8 참고
일용근로소득	매일당 : 150,000차감공제 후 매일계산	단일 6% × 45%
퇴직소득	총 퇴직금 : 연분연승법 공제 등 적용	기본세율
사업소득	자유직업 사업소득 총액에 적용(소득자 실비)	단일 3% 세율
봉사료	음식값 이외 별도의 팁에 부과(공제 없음)	단일 5%
기타소득	특허 산업재산권, 저작권, 일시강연 등 총액의 40%에 적용	단일 20%
종교인 소득	종교인의 총급여 : 높은 소득공제(80%, 50%, 30% 등)	기본세율
일반이자	이자총액에 과세	단일 14%
비영업대금	비금융회사의 자금대여소득 등 총액	단일 25%
배당소득	개인이 받는 배당액(법인은 적용제외)	단일 14%
비실명 금융소득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실명법 위반 등	45%, 90%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5호 / 주간 20호

2024. 5. 15.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소득 원천징수세율과 세금적용 과표 계산방법	표지
C E O 에 세 이	주적이자 동반자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건물 증축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 식대 직원공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 주택분 재산세 요약표	8 9
직장인Survival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매진하라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기업 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 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8408, 2023.03.24) -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 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 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674, 2023.10.23)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자영업자 등 126만명 대상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투자자에게 생산 자금 선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이라도 투자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임	12
세 무 정 보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세요 -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조사 착수'	14 20
회 계 정 보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23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주적이자 동반자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북한은 한국의 주적(主敵)인가, 통일 동반자인가? 타도의 대상인가, 피를 나눈 형제인가? 빨간 도깨비인가, 환호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파트너인가? 북한의 본질은 무엇이며 남북한 통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치 않기에 말만 무성한 백가쟁명인 것 같다.

주적이며 동반자인 것 같고 타도정권이면서도 한민족임에는 틀림없고 빨간 도깨비이면서도 서로 필요한 파트너인 것 같다.

어쨌든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한국기업은, 한국국민은 북한·미사일쇼크 속에서 미래를 일구어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더 무겁다. 남북한 문제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의 시비꺼리이며 남·남대결의 시비꺼리인 것도 지긋지긋하다. 한 때 북한을 공포의 대상으로 이용했던 군사정권이 있었던 만큼 또한 몇 십 년 동안 끊임없이 북한 지도자를 못 만나서 안달인 역대의 정치지도자를 바라봐야 했던 한국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할 정도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의 저자 북한 탈북자 최진이 시인은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나 김형직 사범대학 작가반을 졸업했다. 1999년 11월 드디어 한국행에 성공했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다. 그녀의 ‘반쪽들을 모두 체험하고 찾은 균형’은 남북을 대하는데 어떤 논설보다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해방 전에 전도사를 하신 분을 만난 적 있다. 그분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는 아주 경악하였다. 1896년 대동강에 침입했던 미국의 첫 무장 상선 제너럴셔먼호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배이며, 배가 불에 타자 그 속에 있던 미국 선교사는 성경책을 밖으로 집어던지고 자신은 불붙는 기선 속에서 순교하였다는 것이다. 제너럴셔먼호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첫 침략선이며 그래서 김일성의 증조부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물 위에서 불살라버렸다는 것이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정설이었다. (중략)

한국에 와서 그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그는 대뜸 제너럴셔먼호가 침략선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동감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도사의 말도 틀리진 않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어떻

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내가 보기에 그는 필요 이상의 반미 감정을 지닌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서 나는 비로소 제너럴셔먼호의 대동강 침입을(그 때 배에서 순직한 미국 선교사는 목사직이 파계된 영국인이었다.) 그 전도사의 말대로 선교 위주로 보는 것도 북한 정부의 말대로 침략선 위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둘을 병행해 나란히 바라볼 때, 시선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한국에 와서 배운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다.(중략) 또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북한에서의 민족 정체성 문제이다. ‘주체의 조국’이라 일컫는 북한에서 외국의 것을 극심하게 선망하는 사대주의자로 내가 살았다면 말이 될까. 하지만 그랬다. 나는 북한에서 민족적인 것은 촌놈 냄새와 동의어로 여겼고, 이 말을 원수지고 살았다.(중략)

한국사회에 몸을 담고 어느 정도 시간을 흘러 보낸 뒤에야 나의 사대주의 열기가 북한의 산하와 공기는 물론 이름 없는 초목과 조약돌마저 자기 이름으로 둔갑시켜놓은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에 대한 반향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김일성 김정일과 북한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균형적 사고’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반대로,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을 체험하지 못한 남한 사람들 역시 내가 그러했듯 사고의 불균형성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가 있다.(중략)

북한의 선전물은 하도 허위 투성이라 못 믿겠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들은 북한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북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며 덮어놓고 외면하는 이중적 사고도 문제다. 시골에서 전업 주부로 있던 탈북자에게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와 같은 거대담론을 질문하는 현상도 정말 북한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오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3일 (금)	5월 7일 (화)	5월 8일 (수)	5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378.50	1365.20	1357.80	1364.40
일	본	엔	(JPY)	899.92	885.83	877.44	877.12
영	국	파운	(GBP)	1728.71	1714.49	1697.59	1704.95
캐	나	다	(CAD)	1008.52	998.65	988.71	994.10
홍	콩	달	(HKD)	176.39	174.62	173.61	174.55
중	국	원	(CNH)	190.31	189.55	188.13	188.74
유	로	화	(EUR)	1479.06	1469.84	1459.70	1466.53
호	주	달	(AUD)	905.95	903.97	894.79	897.64
싱	가	폴	(SGD)	1018.02	1010.14	1002.18	1006.49
말	레	이	(MYR)	289.94	288.08	286.58	287.70

건물 증축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Q

당사의 건물 중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 공사 진행 중입니다.

1.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면 취득세 납부 하는것이 맞는지요?
2. 복층으로 증축 공사 한 면적에 추후 크린룸 공사 예정인데 크린룸 공사 완료 시 자본적지출로 추가 예정입니다.

자본적지출 추가 시 건물가액 증가로 인해 취득세 납부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1. 건축법에 따른 개수(대수선)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인데, 귀사가 실시하는 증축은 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 크린룸 공사비용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도 관할 지자체에서 구체적 사실판단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식대 직원공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Q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할때(특정 지역 파견근무 시 도시락 등을 정기적으로 시켜먹을때도 동일 함) 2,500원씩 직원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급여 지급시 공제)

이럴 경우에 직원이 부담하는 2,500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본사에서는 급식업체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보니 직원부담금액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불공제 처리하고 있음)

Q. 파견근무자들이 시켜먹는 도시락에 대해서도 직원이 부담하는 2,5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급식업체의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직원의 개인부담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지

A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회사가 직원들을 대표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직원이 부담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Q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않은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국세청 신고시에 기타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A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Q 매출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1. 용역 매출 (인보이스) 2. 직수출 (필증) 이 있는 경우,
1. 용역 매출(인보이스)는 매출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에 기입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수출실적 명세서의 아래 리스트는 하지 않으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2. 이전의 용역매출(인보이스)를 영세율 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전 것도 수정신고 진행 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3. 매출 부가세의 영세율 기타 (세금계산서발급분X) 에 기입되는 항목은 직수출 (필증) , 용역매출(인보이스) 가 있을때, 두항목 모두 영세율 첨부서류 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필증이 있을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 시 추가로 낼 증빙은 없는건가요? 현재 용역매출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A 국외에서의 용역매출은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하나로 직수출시에 작성하시면 되며, 용역매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되는 것이 원칙인데,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액화 배당가산을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게 된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율은 11%이다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 례]

금 용 소 득	이자소득	① 10,000,000원	기준금액 (20,000,000원)
	배당소득 (상장)	② 10,000,000원(2천만원 채우는 금액까지는 배당가산 안함)	
		③ 10,000,000원(총액화 배당가산)	종합과세 (80,000,000원)
	배당소득 (비상장)	④ 20,000,000원(총액화 배당가산)	
사업소득 과세표준		⑤ 50,000,000원	

※ 종합소득공제금액은 0으로 가정함

(1)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할 때의 산출세액(종합과세 방식)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 방식)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begin{aligned} &= (2\text{천만원} \times 14\%) + [(2\text{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text{여타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 (20,000,000\text{원} \times 14\%) + [(30,000,000\text{원} + 30,000,000 \times 11\%) + (50,000,000\text{원})] \times \text{기본세율} \\ &= 2,800,000 + 14,232,000 = 17,032,000\text{원} \end{aligned}$$

㉡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begin{aligned} &= (\text{금융소득} \times 14\%) + (\text{여타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 (50,000,000\text{원} \times 14\%) + (50,000,000\text{원} \times \text{기본세율}) \\ &= 7,000,000\text{원} + 6,240,000\text{원} = 13,240,000\text{원} \end{aligned}$$

따라서 종합과세방식(㉠)의 세액이 대부분 더 크므로 17,032,000원이 세액으로 결정된다.

(2) 배당세액공제는 다음 ㉢와 ㉣ 중 적은 금액인 3,300,000원을 적용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text{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times 11\% = 30,000,000\text{원} \times 11\% = 3,300,000\text{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방법의 산출세액

$$= 17,032,000\text{원} - 13,240,000\text{원} = 3,792,000\text{원}$$

(3) 납부세액

$$17,032,000\text{원}(\text{산출세액}) - 3,300,000\text{원}(\text{배당세액공제}) = 13,732,000\text{원}$$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2024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	45



세금포인트 사용처

구분	세금포인트 사용처
여가문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세정지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 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수출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주택분 재산세 요약표

과세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토지				
	구분	주택의 세부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납부대상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1)에 공정시장가액비율2)을 곱한 금액 1) 단독 · 공동주택 공시가격 2) 60%* * (22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3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 적용(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 초과 45%)				
세율	•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0.6억원 이하	0.1%		0.05%	
	0.6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6.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12.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57.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4%		42.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35%	
	5.4억원 초과			미적용	
세부담상한	•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따라 세부담상한 적용				
	공시가격	개인 소유			법인 소유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비율	105%	110%	130%	150%
납부기간	• 세액의 1/2은 7.16 ~ 7.31. 나머지 1/2은 9.16. ~ 9.30. 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납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 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 세율을 적용한 금액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 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시가표준액(건축물)×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 * 세율 : 0.04% ~ 0.12% 초과누진세율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매진하라

장기적인 안목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면 무너지기 직전인 독을 버려두고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작은 구멍에 연연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마율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하려면 작은 구멍이 아니라 무너지려는 독을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을 훈련시켰을 때 "시야를 넓고 멀리 봐야 좁은 곳도 잘 볼 수 있다"는 말을 강조했다.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국한되는 말은 아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은 매우 중요하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면 나중에 궁지에 몰려 좌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저술가, 외교관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선기금으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5천 달러를 기증하면서 백 년 이후에 돈을 사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백 년의 세월이 흐르자 5천 달러는 이자가 붙어 42만 달러로 불어났고, 이 돈은 교육을 받지 못한 직장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고 여러 물품을 구입하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학교를 운영할 자금이 없자 평소 프랭클린을 존경하던 세계 최고의 부자 카네기가 흔쾌히 42만 달러를 쾌척했다. 지금도 이 학교에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다.

최신판례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재산-8408, 2023.03.24

■ 질 의

-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따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되므로,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에도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법규국조-1312, 2023.05.24

■ 질 의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계산 방법

■ 회 신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투자자에게 생산 자금 선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이라도
투자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임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674, 2023.10.23

Ⅰ 질 의

-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투자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투자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Ⅰ 회 신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선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에게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

Ⅰ 질 의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 18(6)가 적용되는지 여부

Ⅰ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자영업자 등 126만명 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 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명)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농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세요

- 국세청, 2024. 5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합니다.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주요 항목	공제 누락 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주요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23. 1. 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3. 12. 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23. 12. 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요건) ①~③ : 무주택 세대주 (②·③은 총급여 7천 이하자) ④ :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차입한 차입금
기부금 세액공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 10 ~ 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참고 2

신고 사례별 질문·답변

Q. 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23. 3. 31. (주)◇◇를 퇴사하고 5. 1. (주)□□에 취직했으나, 연말정산 시 (주)◇◇에서 받은 급여 600만 원을 합산하지 않아 신고하는 경우

구 분	3월 연말정산	5. 31. 종합소득세 신고	8. 31. 기한후신고
총급여	3,4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산출세액	160만 원	230만 원	230만 원
세액공제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결정세액	90만 원	160만 원	160만 원
기납부세액	80만 원	90만 원	90만 원
추가납부세액	10만 원	70만 원	85.4만 원* (①+②+③)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22/100,000)

②14만 원

③1.4만 원

Q. 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2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 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3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3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Q. 4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4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하여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다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C는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기본공제 300만 원(150만 원 × 2인)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가산세 걱정을 덜게 되었음

구 분	3월 연말정산	5. 31. 종합소득세 신고	8. 31. 수정신고
총급여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결정세액	100만 원	145만 원 (소득공제 300만 원 × 15% 추가)	145만 원
기납부세액	9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추가납부세액	10만 원	①45만 원	50.5만 원* (①+②+③)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납부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22/100,000)

②4.5만 원
③1.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 공제 불가

Q. 5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5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6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예시] 총급여가 6,000만 원인 B는 '23. 5. 30.부터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하여 '23년 중 부담한 월세 400만 원(50만 원 × 8개월)의 15%인 60만 원을 공제받아 환급금 수령

구 분		3월 연말정산 시	5.3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급여	200	6,000만 원	6,000만 원
산출세액		300만 원	300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160만 원 (월세 세액공제 400만 원 × 15% 추가)
결정세액		200만 원	140만 원
기납부세액		170만 원	200만 원

→

추가납부세액	30만 원	
환급세액		60만 원

Q. 7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A. 7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신고안내 영상” 또는 “신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링크 URL) <https://www.youtube.com/watch?v=S9Hsc212ZKs>

* (신고안내 매뉴얼)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 참고자료실(50번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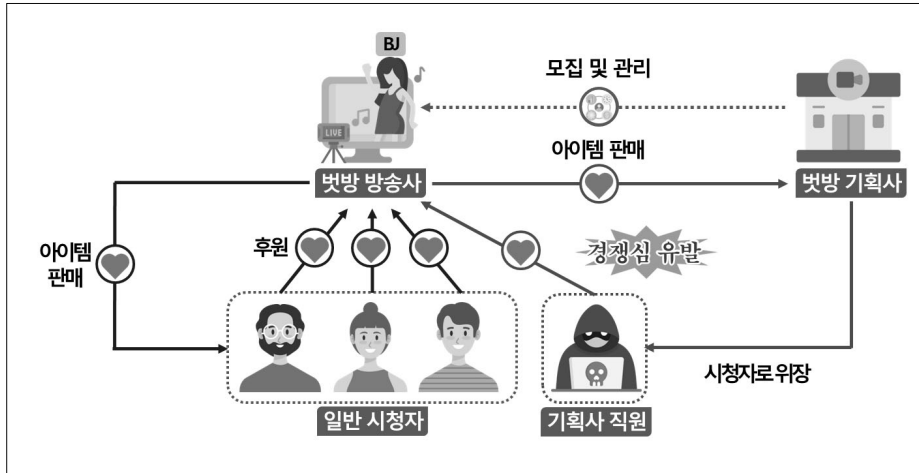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조사 착수

— 국세청, 2024. 5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벵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합니다.
- * ‘벵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 최근 성행하는 벵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벵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입니다.
-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 벵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 ☐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습니다.
- ☐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무니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 ☐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을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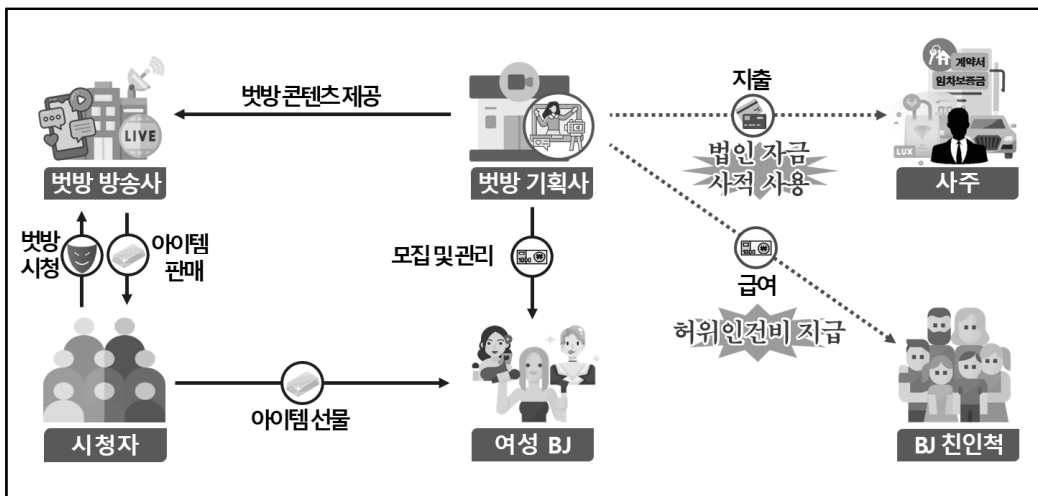
-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붙임

조사사례

착수사례

BJ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명품 구입·고급 외제차 비용 등 업무관련 사적 경비를 부당 계상한 벚방 기획사



□ 주요 탈루혐의

-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벚방 방송사를 통해 벚방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 후, 벚방 방송사로부터 시청자들의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을 수취하는 벚방 기획사 □□□은,
 -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가공 경비를 계상함
- 또한 사주는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한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 가공 경비 및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4. 5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
- 금번 '23년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번에 공개하는 '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6건으로,
- 이외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으로 구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건)

공개 시기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연도		'23년	'22년	'21년	'11년~ '14년	'20년	'15년~ '17년	'18년~ '19년	'11년~ '23년
지 적 유 형	❶ 매출·매출원가	6	3	4	4	5	12	4	38
	❷ 투자주식	-	4	3	4	5	6	4	26
	❸ 재고 및 유·무형자산	2	3	3	-	1	5	7	21
	❹ 기타자산·부채	4	5	2	8	2	5	7	33
	❺ 주석미기재 등	2	3	3	11	2	9	7	37
지적사례 수(합계)		14	18	15	27	15	37	29	15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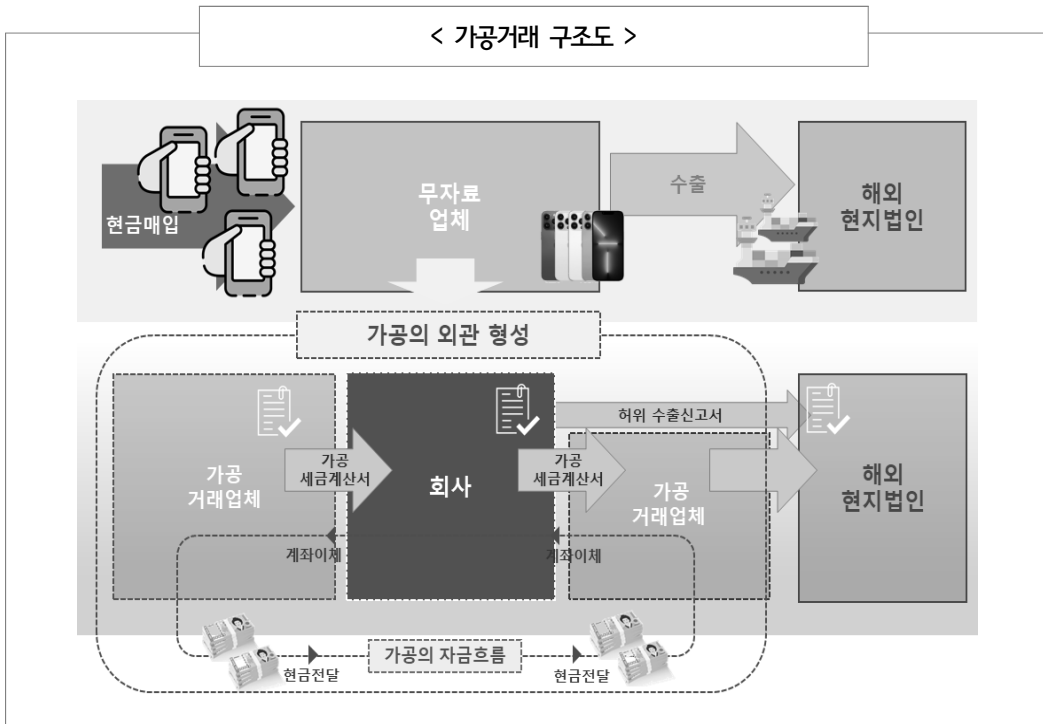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 (사실관계)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였음

*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여,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하였음
- 또한,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 (시사점)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 동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사실관계) B사(이하 '회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하였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였음
- 이에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하였음

$$* \text{공사수익(누적)} = \text{도급금액} \times \frac{\text{실제 투입원가}}{\text{총 공사예정원가}}$$

-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되었으며,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하였음

< 공사수익·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사업장 ①

구분	정상(A)	회사(B)	과대(B-A)
도급금액	100	120	20
진행률(%)	20	20	-
공사수익(누적)	20	24	4

사업장 ②

구분	정상(A)	회사(B)	과대(B-A)
도급금액	180	200	20
진행률(%)	30	30	-
공사수익(누적)	54	60	6

사업장 ③

구분	정상(A)	회사(B)	과대(B-A)
도급금액	350	380	30
진행률(%)	40	40	-
공사수익(누적)	140	152	12



공사미수금 =
사업장별로 과대 인식한
공사수익의 합계
(22=4+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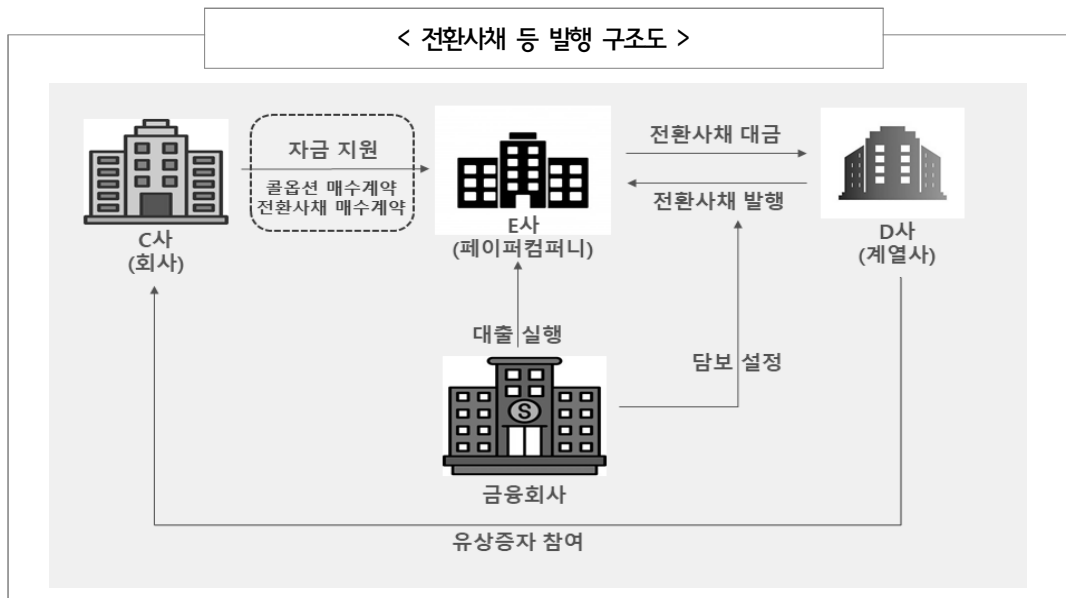
- (지적내용) 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하는 한편,
 -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하여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 (사실관계) C그룹은 C사(이하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예 : 행사가격)이 누락되었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 ☐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Database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붙임 1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목록

① 매출·매출원가(6건)

1.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2.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4.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5.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6.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② 재고·유형자산(2건)

1.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2. FSS/25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③ 기타 자산·부채(4건)

1.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2.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 계상 오류
4.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④ 주식미기재 등(2건)

1.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2.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붙임 2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2.12.1.~2019.11.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도매상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매상과 거래 시 사전에 의약품별 판매장려금 요율 등을 확정하고 이후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 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매출을 인식하였고, 결산시에는 향후 정산예정 판매장려금 추정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재무제표상 미지급장려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매출 발생시점(제품 인도시)에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요율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출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였고, 기말에는 미지급장려금을 비합리적으로 과소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 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문단50 및 문단51에 따르면,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은 매출 및 매출채권과 연관되는 중요한 계정과목임에도 판매장려금 관련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또한,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기말에 단순히 과거 설정비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전기 대비 비율분석만으로 합리성을 평가하고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시 채권조회서 상 확인요청 정보에 미지급장려금을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계약상 할인,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등 제공여부 및 이에 따른 변동대가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405-02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 결정일 : 2023년
- ▣ 회계결산일 : 2018.1.1.~202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주로 도매상과 약국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코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도매상을 섭외 후 대여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한 매출 및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섭외한 도매상이 기존 거래하던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거래에 중간 공급처로 참여하기로 하고,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으로만 매입 및 매출을 처리하는 등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매출 등을 허위로 인식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허위매출 등을 발생시킨 이면약정을 은폐하여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 재고의 이동없이 계상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가 특정업체와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 거래에서 매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매출총이익을 시현하였고, 회사에 진단시약 인력 및 설비 등이 미비하고 발주 및 인수 서류 등 실물거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시약 매출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코스닥상장(IPO), 투자유치 추진 등으로 인해 회계부정 및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인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적 검토, 강화된 감사절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FSS/2405-03 :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이중보온관의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열배관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시도하였으나 공사매출의 감소 등으로 미승인 판정을 받아 상장 재시도를 위해 공사매출의 증대 유인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원가가 당초 예상원가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거래 상대방과의 명시적인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또한, 공사완료 이후 거래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누적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일시에 당기 대손비용으로 전액 상각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거래 상대방과의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x1~x8년까지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x9년 중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장기간 누적되어 온 공사미수금의 실재성을 입증받도록 요구받자, 전기 재무제표(x1~x8년)를 소급·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시 상각하여 x9년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이외 건설공사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 ② 또한, 공사수익은 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계약금액에 근거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을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이 있어야 한다.
- ③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르면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시 그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A23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적 판단은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에 경영진 판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 ②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5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무작위 표본 중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거래처와 구두상 협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주장을 합리적 의구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회사가 제시한 공사미수금의 상당부분은 공사완공 후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실상 既 투입원가의 청구권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채권의 실재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④ 또한,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장기 미수금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추후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미수금 전액을 당기 대손비용으로 전액 상각처리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전기이전 오류의 수정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코스닥 이전상장 시도 등 회사의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매출 등 수익인식기준 및 미수금 계정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 및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정당성,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가공계정의 은폐를 위해 당기에 일시 처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FSS/2405-04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x1~x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지적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실적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실질사주의 보유지분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을 증대시킬 유인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실제 중고폰 유통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외관상 모바일사업부를 신설하여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근거로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었다.

또한, 감사인에게 제시할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질사주로부터 일정 자금을 빌려 매출처에서 회사, 회사에서 매입처 등으로 순차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매출·매입에 수반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조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 제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할 수 있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2 및 31 등에 따르면, 기업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일부 연도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A23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적 판단은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에 경영진 판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 ②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5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1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의 변경 및 추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④ x4년 감사인은 회사에 영업실적 증대 유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회사가 신규로 개시한 업종의 성격 및 규제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수출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B사가 수출처와 공동으로 대금지급을 책임지고 수출대금이 B사를 통해 원화로 회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출대금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B사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회수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회사와 B사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⑤ x5~x6년 감사인은 회사의 모바일사업부 사무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검수업무를 입회하여 확인하였으며, 거래처인 B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사가 인식한 매출거래에 대한 감사증거 확보를 위하여 B사에 대하여 채권잔액 이외에도 기중 거래 및 대금 회수내역을 첨부한 사실조회 확인서를 송부하여 수령하였다. 가격결정권한 등 회사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미 출고된 재고에 대하여는 대체적 절차를 통해 출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견지하고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회피 등 재무적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사업이 발생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업종의 성격 및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동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감사정보로 사용될 정보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적용되는 검사 및 이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공급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장비의 ①제조 및 판매, ②설치 및 시운전 용역, ③무상보증을 하나의 계약으로 제공하고 있고, 한 시점에 이행하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공정 장비의 선적시점(수출매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의 경우,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모든 수출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과대(x8년) 또는 과소(x9년)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에 따르면,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에 대해 하기와 같이 통제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회사의 대금 회수 절차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이루어지며,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수된 계약금(중도금)은 반환의무가 있다. 즉,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을 수취할 권리(지급청구권)가 취득된다.
- ② 계약서상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법적 소유권이 이전됨이 명시되어 있다.
- ③ 최종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모두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대금 회수절차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사점

매출 유형별로 통제의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수익인식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매출 유형별 통제 이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405-06 : 매출 기간 귀속요류

- ▣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결정일: 2023년
- ▣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태양광발전소 연계 Energy Storage System 납품 및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회사는 사용전 검사 완료일 이후에 납품 관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용승인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납품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인수)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납품용역과 설치용역을 각각의 계약으로 보아 납품이 이루어질 때, 납품의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납품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사용전검사 후 납품대가의 회수가 가능하고, 납품 후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 등이 가능해야 납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에도,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을 계약서상 개별 계약으로 보아 납품시에 납품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29에 따르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31에 따르면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용역의 경우 설치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금지급이나,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납품과 설치용역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보고, 납품 후 설치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납품 관련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검토하여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FSS/2405-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해외에서 의료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중간 도·소매상 및 종합병원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회사의 재고 입·출고 담당 현업부서에서는 입·출고시 발생한 일시적 차이 또는 불량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업무 편의상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 내에 가상의 창고(이하 '관리창고')를 개설하고 실물이 없는 재고를 재고수불부에 임시로 가감하여 왔었다.

그러나 ERP에 관리창고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부서가 이를 승인하거나 통보받는 통제절차가 없었으며, 현업부서 직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한 인수인계 미비 및 ERP 조작미숙 등의 사유로 가공의 재고자산이 정리되지 않고 관리창고에 계속 방치되는 문제가 장기간 누적되었다.

또한, 회계담당부서는 ERP가 낙후되어 보관 위치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이 전체의 33%~36% 수준으로 상당한 부분이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매년말 주요 창고에 대해서만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재고실사시 이용한 주요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와 재무제표 결산시 이용되는 ERP상 최종 재고수불부를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재고자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회사는 xx년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재고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창고에 계상된 재고자산이 실재하지 않음을 파악하였으며 그 금액이 전체 재고자산 금액의 약 20% 정도로 유의적임을 알게 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입·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물이 없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항목을 재고수불부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문단 4.3 및 4.5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6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이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실재하지 않은 관리창고의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4(b)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 A3에 따르면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를 계획할 때에는 장소별 재고자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회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서 530(표본감사) 문단 A5에 따르면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매년말 재고실사 입회시 회사의 전체 재고자산 명세를 수령하지 않고 주요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만을 수령하였으며, 주요 창고 이외의 재고자산이 총 재고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적 비중이 30%를 초과하는데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지 않고 재고실사 입회 등의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누락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재고실사를 실시한 주요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이하 '(가)')와 ERP상 최종 재고수불부(이하 '(나)')를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가)와 (나)에서 각각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상대 명세와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추출한 표본은 ((가)→(나) 및 (나)→(가) 대사 각 16개) 모두 (가)에서 재고실사 입회시 선정한 표본 170여 개 중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가)와 (나)의 수량이 일치하여 예외사항이 없다고 조서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본 추출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가)가 (나)를 모두 반영한 '완전한' 목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품목 전체(약 3만개)를 모집단으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가)에 계상된 품목과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감사인이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했다면 품목과 수량이 불일치하는 표본을 다수 발견하였을 것이고,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이 계상된 관리창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시사점

- ① 회사의 회계담당부서는 현업부서가 관리창고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통보받는 절차를 갖추지 않았으며, 보관위치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등 ERP가 낙후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고실사시 최종 재고자산 수 불부와 대사하는 절차도 수행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였다. 그 결과 수년간 가공의 재고자산이 관리창고에 누적되어 거액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다. 회사가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히 설계·운영하였다면 이같은 오류는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경우 재고실사뿐만 아니라 재고실사 명세와 전체 재고자산 수불부의 대사를 통해 재고자산 명세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FSS/2405-08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장품 및 화장품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상품 납품업체와 매입계약 체결시에 물류 대행, EDI 시스템 이용, 광고매대 제공, 시장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이하 '물류대행 수수료 등')를 수취하며, 물류대행 수수료 등은 매월 납품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결제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회사는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 관련 원가에서 차감하기로 결정하고, 상품의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 납품업체에 물류대행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해당 상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원가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라, 미판매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르면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또한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물류대행 수수료 등은 회사가 부여한 선택권을 납품업체가 행사(물류대행, EDI 시스템, 광고매대, 시장조사 용역 이용)할 경우 매입단가를 차별화하기 위해 수수하는 금전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매입할인과 유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재고자산 매



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할인 및 리베이트와 유사한 항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유사한 항목인 경우 재고자산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FSS/2405-09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와 B사는 C그룹의 계열사로, 회사는 B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의 B사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 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매수 대가로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총 16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한 콜옵션 계약의 경우, 계약서 등에 옵션의 기본적인 사항인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는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D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콜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전환사채(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들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회사의 증권계좌 등으로 동 전환사채를 이체받은 적이 없으며, 발행사가 지급하는 표면이자도 수령하지 않는 등 회사는 사실상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결산시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파생상품자산(16억원) 등으로 계상하고 특히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에도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서를 바탕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8억원)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콜옵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환사채(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회사의 증권 계좌에 이체된 적이 없는 등 회사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

즉, 회사는 허위계약을 통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산성이 없는 파생

상품자산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고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며,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계상한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콜옵션 매매계약서상 옵션의 중요사항인 행사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가 전환사채 평가서를 근거로 임의로 콜옵션을 평가했음에도 추가 서류 확인,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매수한 전환사채가 회사 증권계좌 등에서 확인되지 않음에도 전환사채의 실재성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공정가치 평가서 등 검토, 대금지급 증빙 확인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 수행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가 서류확인, 회사의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FSS/2405-10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제조기술과 영업력을 보유하면서 하청회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유출된 금액만큼 재무제표상 선급금, 외주가공비 등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진의 횡령으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의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건설중인 자산을 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B사의 투자자금 조달과정에서 필요한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해 B사에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도록 허위의 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외주가공비 등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인식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B사와 허위의 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외주가공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산과 비용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의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산, 비용을 과대계상 함으로써,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의 금액이 중요하고, 건설회사가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존재하였음에도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표본추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허위의 건설계약 관련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취득증빙 확인을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③ 한편, 감사인은 선급금, 외주가공비 등 횡령관련 계정과목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확인하고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였고, 거래처가 채권채무조회서에 '이상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표본추출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등 모든 유형자산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금액이 중요하고 건설회사가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SS/2405-11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쟁점 분야: 개별 취득 무형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특허 기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약정에 따르면 회사는 특허권의 만기까지 특허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B사에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B사에게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9~17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③ 동 기준서 문단 25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계약상 권리로부 터 발생 및 분리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2) 계약지역 내 독점적 상업화 권리를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3) 전용실시권을 통해 직접 매출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의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1)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충족하고, 2)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기술의 독점적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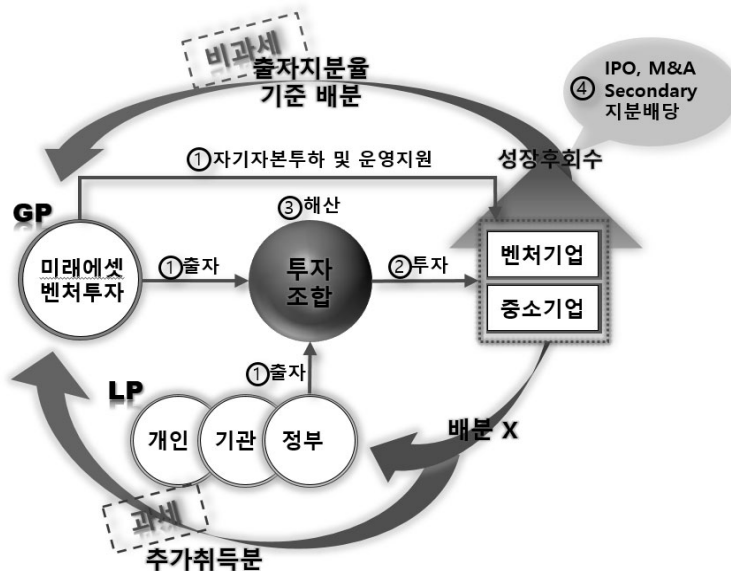
FSS/2405-12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과 회사의 고유계정을 사용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조합 청산시 동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배분하거나 주식으로 배분하여 투자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하는 주식 중 회사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나 출자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며, 회사는 이러한 조세법령을 오해하여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비과세로 판단하고 보고기간 말 과세대상 주식평가시 발생한 평가차익 192억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한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라 함은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며 문단 20에서 자산을 재평가하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을 생기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A회사가 과세대상 추가취득분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4. 시사점

회사의 수입 중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FSS/2405-13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금융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영화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형태의 사업(비상장주식, 수익증권·출자금)과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영화 등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금을 금융상품(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보유 중이다.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 분류한 비상장주식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은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FVOCI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으로,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프로젝트투자금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하 'AC')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비상장주식을 FVOCI로 적절하게 분류하였으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된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잘못 인식하는 일관성 없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수익증권·출자금의 경우 만기에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 요청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어 지분상품이 아닌 채무상품에 해당하나, 금융상품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한 지분율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분상품으로 판단하였으며, 현금흐름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PL')이 아닌 FVOCI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최초 인식시 분류된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프로젝트투자금의 경우 현금흐름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AC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FVPL이 아닌 AC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4.1.2의 두 가지 조건(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모두 충족시 AC로, 문단4.1.2A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FVOCI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FVPL로 분류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7.1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익과 FVOCI로 분류된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의 변동 등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FVOCI로 분류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익증권·출자금과 프로젝트투자금은 FVPL로, FVPL로 분류된 수익증권·출자금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 및 수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해당 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 성격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회사의 잘못된 금융상품 및 평가손익의 분류 회계처리를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계정 분류 및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분류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모형의 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 및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 성격 등을 검토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405-14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2023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이하 '회사') 및 그 종속기업 R사는 계열회사인 S사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R사는 특수관계자 S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는데 이를 R사의 개별재무제표 주식에만 기재하고,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는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당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특수관계자 S사가 참여하였으나, 동 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와 그 종속기업 R사는 계열회사인 S사와 특수관계자거래(유상증자, 제공받은 지급보증)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채무에 대하여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한다.
- ②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1에서 공시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예를 나열하고 있는데,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현금출자를 포함)을 명시하고 있다.

4.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식공시 할 때 지급보증 이나 출자거래 등 기타 약정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과 그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